

#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

우세나\*\* · 양천수\*\*\*

## I. 서론

인권교육은 그 자체가 인권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인권법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한다. 인권교육을 통해 각 인간주체는 진정한 인권의 주체로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교육에 참여함으로써 각 인간주체는 인권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마치 인간이 계몽을 통해 실천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용기를 갖추는 것처럼 말이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인권법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권교육의 행동체계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를 다루고자 한다. 특히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을 상정하여 이를 위한 기본구상 및 실행과제를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 기본구상

### 1. 비전

우선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으로 출발점으로서 인권교육 행동계획의 비전(vision)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이 문제는 왜 우리가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와도 관련을 맺는다.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인권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를 넘어서 인권교육은 인권교육 참여자에게 인권감수성을 불러일으키고, 이를 통해 인권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하자면,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인권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권실천이 지향하는 바는, 모든 이들이 자신의 인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는 사회, 즉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요컨대, 우리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인권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

\* 이 글은 공동필자인 양천수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국가인권위원회 용역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연구』(2012)에서 양천수 교수가 집필한 부분을 공동필자인 우세나 교수가 대폭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 법학박사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법학박사

1) ‘공정함’(fairness)을 정의의 내용으로 추구한 롤스(J. Rawls)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마이클 샌델, 이창신 (옮김), 『정의란 무엇인가』(김영사, 2010), 197쪽 아래 참고.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철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공정한 사회’는 이를 철학적으로 정립한 롤스(J. Rawls)에게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자유주의에 기반을 두는 개념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유주의적인 공정함을 넘어서 다함께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달리 말해 동반해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즉 공정함의 의미를 자유주의적인 공정함을 넘어서 ‘공생’의 의미까지 확장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권교육을 통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공정한 사회의 의미를 포함하는 ‘공생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 <도식> 인권교육의 방향

인권교육 ⇨ 인권에 대한 지식 및 감수성 향상 ⇨ 인권실천  
⇨ 인권친화적 구조개혁 ⇨ 공생사회 실현

이 같은 맥락에서 필자들은 앞으로 실행해야 할 인권교육 행동계획의 비전을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비 전>

인권교육 실질화를 통한 공생사회 실현

## 2. 기본원칙

인권교육 행동계획은 이와 같은 비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권교육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으로서 필자들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권교육은 이 세 원칙을 통해 실시되어야만 인권교육이 본래 추구해야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 권리로서 인권교육

첫째, 인권교육은 인권교육 참여자에게 권리로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권리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은,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당사자에게 법적으로 인권교육을 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를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측면에서 보면,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당사자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각 인권주체들은 교육주체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교육주체들은 의무로서 응해야 한다. 필자들은 이렇게 인권교육을 일종의 권리로서, 더 나아가 인권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만 현재 인권에 대해 막연하게 존재하는 거부감도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sup>2)</sup>

## **(2) 통합적 접근대상으로서 인권교육**

둘째, 인권교육은 어느 한 관점, 즉 어느 일방의 서사방식만을 담아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원칙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인권교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전문적 서사방식과 근원적 서사방식 그리고 응용적 서사방식을 모두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 가령 공무원 인권교육은 공무원을 교육참여자로 한다는 점에서 응용적 서사방식에 치우치기 쉽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인권 자체가 갖고 있는 복합적이면서 통합적인 성격을 놓치기 쉽다고 생각한다.<sup>3)</sup> 그러므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는 각기 다양한 시각과 관점들이 교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만 인권교육에 대해 존재하는 일정한 편견 역시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3)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인권교육**

셋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각각의 인권 및 인권교육 참여자들이 처한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이 강조하는 점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인권교육은 보편성을 지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인권교육은 해당 인권이 적용되는 영역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면, 그 인권교육은 해당 인권교육 참여자들에게는 주입식 강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는 공감도 실천도 불러일으킬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의 실질화를 위해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3. 4대 핵심목표**

다음으로 위에서 설정한 비전과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추구해야 할 인권교육의 핵심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현재 필자들은 인권교육의 행동계획안으로서 4대 핵심목표를 구상하고 있다. 여기서 4대 핵심목표란 인권교육의 권리화, 인권교육의 전문화, 인권교육의 제도화, 인권교육의 지역화를 말한다.

## **(1) 인권교육의 권리화**

먼저 인권교육의 권리화는 인권교육을 인권으로서, 더 나아가 실정법상 권리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인권교육을 평생교육으로 보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또한 그 동안 인권교육에서 제외된 부분을 인권교육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도 인권교육의 권리화에 해

2) 인권교육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없애는 것도 인권교육 행동계획안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전략과 제라고 생각한다.

3) 이러한 인권의 속성을 지적하는 양천수, “인권법의 통합과학적 성격”, 『인권이론과 실천』(영남대) 제2호(2007.10), 117-129쪽.

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인권에 대한 근거 없는 편견이나 오해를 없애는 것도 인권교육의 권리화에 속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인권교육의 전문화**

나아가 인권교육의 전문화를 핵심목표로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 인권교육의 전문화는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인권교육의 형식적 전문화와 내용적 전문화가 그것이다. 여기서 인권교육의 형식적 전문화는 달리 인권교육의 체계화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인권교육을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권교육 자체가 체계화될 수 있어야 한다. 인권교육을 체계화한다는 것은, 형식과 절차 면에서 인권교육을 더욱 다듬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교육의 체계화는 인권교육을 형식적인 측면에서 전문화한다는 것으로 새길 수 있다. 이렇게 인권교육이 체계화되어야만 비로소 인권교육을 내용적으로 전문화할 수 있다. 여기서 인권교육의 전문화란 인권교육의 내용을 사회의 각 전문영역에 맞춰 전문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인권교육전문가,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과 같은 전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제2차 세계인권교육 프로그램의 방향에 상응하는 것이기도 하다.

## **(3) 인권교육의 제도화**

다음으로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핵심목표로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인권교육의 제도화란 인권교육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여건을 확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인권교육 제도화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인권교육이 제도화되어야만 인권교육이 더욱 안정된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 **(4) 인권교육의 지역화**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의 지역화를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의 핵심목표로 거론할 수 있다. 인권교육의 지역화란 말 그대로 인권교육이 서울로 상징화되는 중앙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지방에서도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적·물적·제도적 여건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인권교육지역협의체를 마련하는 것이나 인권조례제정을 지원하는 것 등이 인권교육의 지역화에 해당하는 과제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 **4. 성과목표**

위에서 필자들은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의 비전, 기본원칙, 4대 핵심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아주 추상적이어서, 이들만으로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이나 실천과제를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보다 좀 더 구체적인 목표, 즉 성과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같은 이유에서 필자들은 각각의 핵심목표 아래에 이러한 핵심목표를 좀 더 구체화하는 성과목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각각의 핵심목표에 상

응하는 성과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인권교육의 권리화**

첫 번째 핵심목표인 인권교육의 권리화를 구체화하는 성과목표로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와 일상생활 친화적인 인권교육여건 마련이 그것이다.

#### **1)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

인권교육의 권리화라는 핵심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권에 대해 존재하는 부정적 인식, 즉 인권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없애야 한다. 인권을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구성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권교육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 역시 불식시킬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권교육 그 자체를 독자적인 권리로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권 그리고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 필자들은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이 점에서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를 인권교육의 권리화를 실현하기 위한 성과목표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 일상생활 친화적인 인권교육여건 마련**

나아가 일상생활 친화적인 인권교육여건 마련을 인권교육의 권리화를 위한 성과목표로 언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해 존재하는 근거 없는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려면, 인권과 인권교육이 일종의 권리이자 우리 일상생활에 꼭 필요하면서 친근한 그 무엇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인권이 투쟁적이고 차가우며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친근하고 따뜻하며 그래서 꼭 필요한 것으로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자체가 우리의 일상생활에 녹아들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일상생활 친화적인 인권교육여건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 **(2) 인권교육의 전문화**

두 번째 핵심목표인 인권교육의 전문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성과목표로서는 크게 다섯 가지를 거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교육내용의 전문화, 인권교육강사의 전문화, 인권교수방식의 전문화, 인권교육실행체계의 전문화, 특정분야 인권교육 강화가 그것이다.

#### **1) 인권교육내용의 전문화**

인권교육의 전문화를 실현하려면 우선 인권교육내용 즉, 인권교육의 콘텐츠를 전문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인권교육의 질적인 측면을 구성하는 인권교육내용 자체가 전문화되어야만 인권교육의 전문화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인권교육내용의 전문화를 꾀할 수 있을까?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인권교육에 필요한 인권교과목을 전문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렇게 개발한 전문인권교과목에 필요한 전문인권교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 2) 인권교육강사의 전문화

나아가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인권교육강사를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도 다수의 전문적인 인권교육강사가 존재한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 강사들이 어느 일정영역에 다소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가령 인권의 특성상 시민사회영역에는 전문적인, 그러니까 인권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권강사가 다수 존재한다. 이에 반해 공공영역에는 인권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현장경험 및 인권감수성을 고루 갖춘 인권강사를 찾기 어려울 때가 많다. 그 때문에 공공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은 자칫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할 우려가 상존한다.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인권교육강사를 전문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이 때 두 가지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인권교육강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인권교육강사의 전문성 정도를 통일하는 것이다.

## 3) 인권교수방식의 전문화

다음으로 인권교수방식의 전문화를 성과목표로 언급할 수 있다. 아무리 인권교육내용이 전문화되고 이를 담당하는 인권교육강사가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인권교육내용을 전달하는 인권교수방식 자체가 전문화되어 있지 않으면, 성공적인 인권교육을 수행할 수 없다. 특히, 가장 전형적인 교수방식인 주입식 강의방식으로 인권교육을 실행하면, 인권감수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인권교육을 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수평적인 쌍방향 소통방식에 상응하는 창의적이고 다양한 인권교수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러한 인권교수방식의 전문화는 인권교육강사를 전문화하는 것과는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인권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고 또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권강사의 경우에는 이미 인권교육방식에 대한 독자적인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인권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데도 인권을 교육한 경험이 적어 인권교육에 필요한 적절한 교수방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다수 발견할 수 있다. 학문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교수가 오히려 대학강의를 잘 하지 못하는 경우를 곧잘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서 인권교육강사의 전문화와는 별도로 인권교수방식의 전문화를 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4) 인권교육실행체계의 전문화

이어서 인권교육실행체계의 전문화를 성과목표로 제시할 수 있다. 인권교육을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체계 역시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인권교육실행체계를 전문화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교과목과 인권교육강사 그리고 교수법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인권교육을 제대로 실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교육 자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실행체계 역시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sup>4)</sup>

### (a) 좁은 의미의 인권교육실행체계의 전문화

이러한 인권교육실행체계의 전문화는 다시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인권

---

4) 최근 몇 년 전부터 국정목표로 강조된 ‘선진화’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투입’(input)의 측면과 인권교육 ‘산출’(output)의 측면이 그것이다. 우선 인권교육 투입과 관련된 체계를 전문화해야 한다. 이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구조, 절차, 과정 등을 전문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인권교육실행체계를 전문화하는 것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다.

#### **(b) 인권교육평가체계의 전문화**

나아가 인권교육 산출과 관련된 체계를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인권교육이 제대로 산출되었는지, 다시 말해 원래 목표한 바대로 실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체계를 전문화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인권교육평가체계를 전문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인권교육평가체계를 전문화해야만 인권교육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인권교육평가체계에는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내용을 ‘환류’(feedback)시키는 체계까지 포함한다.

#### **5) 특정분야 인권교육 강화**

마지막으로 특정분야 인권교육 강화를 성과목표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성과목표는 앞으로 우선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할 분야가 있는 경우 유용하다. 최근 들어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정보인권이나 기업과 인권 그리고 사회복지와 인권 등이 이 같은 분야라고 말할 수 있다. 이들 분야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3) 인권교육의 제도화**

세 번째 핵심목표인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성과목표로는 크게 세 가지를 떠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교육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초 확보,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인권교육에 필요한 물적 기반 확보가 그것이다.

##### **1) 인권교육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초 확보**

우선 인권교육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초 확보를 인권교육 제도화의 성과목표로 생각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인권교육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제도적 기초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을 전문화하거나 체계화하는 것만으로는 인권교육이 현실적으로 실행되는 것을 담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무엇보다도 법적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 **2)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다음으로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을 성과목표로 제시할 수 있다. 인권교육이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인권을 교육을 단순히 실행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만약 인권교육을 실행시키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면, 인권교육은 자칫 외형에만 치중할

수 있다. 그 동안 이루어진 인권교육의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인권교육의 형식화는 바로 이처럼 인권교육을 양적으로 실행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으로써 야기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이 성공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으려면,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를 위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 여기서도 <투입-산출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생각한다. 위에서 언급한 성과목표, 즉 인권교육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초 확보는 인권교육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을 맺는다. 이에 반해 두 번째 성과목표인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은 인권교육의 산출과 관련을 맺는다고 생각한다. 즉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제대로 산출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서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권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것도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 3)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나아가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을 성과목표로 언급할 수 있다. 인권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인권교육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만약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환경이 비인권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강사가 좋은 콘텐츠와 교수방식으로 인권을 교육한다고 하더라도, 이 인권교육은 인권감수성을 전달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실현할 수 없다. 따라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환경 역시 인권친화적으로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 4) 인권교육에 필요한 물적 기반 확보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에 필요한 물적 기반 확보를 성과목표로 거론할 수 있다. 현대 민주적 법치국가에서 일정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건을 필수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법적 기반이고, 둘째는 물적 기반이다.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물적 기반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이는 인권교육정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인권교육을 실행하는 데는 당연히 물적 기반, 즉 예산이 필요하다.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적절하게 실행할 수 없다. 이 점에서 인권교육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 (4) 인권교육의 지역화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의 지역화를 실현하기 위한 성과목표로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와 인권교육 협력 강화, 지역시민사회와 인권교육 협력 강화, 지역대학과 인권교육 협력 강화,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인권교육의 지역화에서는 인권교육에 관해 중앙과 지방 사이의 소통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인권교육에 관해 중앙과 지방 사이에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만 인권교육의 지역화를 실현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단체와 인권교육 협력 강화

첫째, 지방자치단체와 인권교육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교육청이 인권교육에 협력하지 않으면, 인권교육을 전국적으로 파급시킬 수 없다. 이는 무엇보다도 최근 각 지역에서 제정되고 있는 인권조례정책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2) 지역시민사회와 인권교육 협력 강화

둘째, 지역시민사회와 인권교육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시민사회와 인권교육에 관해 협력하지 못하면, 자칫 ‘Top Down’ 방식의 하향식 인권교육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인권교육이 본래 지향하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 인권감수성 함양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권교육은 하향식 교육방식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시민사회와, 그 중에서도 지역인권단체와 인권교육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야만 한다.

### 3) 지역대학과 인권교육 협력 강화

셋째, 지역대학과 인권교육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이 강조하는 고등교육상 인권교육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행히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몇몇 유망 지역대학을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하여 서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선 이들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과 인권교육에 대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상 인권교육의 지역화를 꾀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지역대학과도 추가적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 4)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

넷째,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인권교육의 지역화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제적 협력은 특히 동아시아 공동체를 염두에 둔 것이므로, 넓은 의미의 지역화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제는 한국, 일본, 중국을 주축으로 한 동아시아 공동체 안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III.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실행과제 분석

지금까지 II.에서는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의 추진체계를 개관하였다. 이어 아래 III.에서는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이 마련하고 있는 각각의 실행과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 1. 인권교육의 권리화

#### (1)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

### 1) 인권교육 홍보광고 추진

인권과 인권교육이 부정적이고 투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친근한 그 무엇으로 각인시키려면,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인권교육 홍보광고를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대중매체와 이미지가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을 이성적으로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이미지를 매개로 한 감성적인 전략으로 설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이 점에서 공익광고 형식으로 인권교육 홍보광고를 제작해서 소통시키면,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요즘 에이즈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자 에이즈 공익광고를 펼치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 2) 인권교육 뉴스레터 발간

인권교육 뉴스레터를 발간하는 것도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사항을 담은 뉴스레터를 발간하여 이매일을 통해 전파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으로 인권교육 뉴스레터를 전문적으로 발간·전파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만약 인권교육 뉴스레터를 독자적으로 발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기존의 뉴스레터에 인권교육 분야를 특화하거나 강화하여 발간·전파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3) 전국 대학생 대상 모의 인권위원회 대회 개최

전국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하여 모의 인권위원회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인권과 인권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유익하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모의 인권위원회 대회를 개최하면, 앞으로 유능한 법률가 자원을 국가인권위원회로 끌어들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미 가인법정변론대회, 모의세계검찰총장대회,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대회 등 각종 대회들이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같은 고급인력을 유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차원에서 모의 인권위원회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 4) 인권교육 논문공모전 실시

인권교육에 관한 논문공모전을 실시하는 것도 인권교육의 권리화를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인권교육에 관한 논문을 스스로 작성해 봄으로써, 인권과 인권교육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도 인권논문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더하여 인권교육 논문공모전을 별도로 실시하는 것이 행정상 번거로운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인권논문 공모전을 실시할 때 인권교육 논문에 관한 파트를 별도로 특화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2) 일상생활 친화적인 인권교육여건 마련

### 1) 인권도시사업 지원

현재 광주광역시 추진하고 있는 인권도시사업이야말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인권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sup>5)</sup> 도시 전체가 인권친화적으로 구조화된다면,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인권교육 자체를 일상생활에 필수적이면서 친근한 삶의 요소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도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 인권교육도시사업 지원

인권도시사업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면, 이와 별도로 인권교육만을 특화하여 인권교육도시사업을 지원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인권교육도시는 말 그대로 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체계화하고 실행하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용역으로 이미 연구된 바 있는 평생학습도시 구상을 응용하는 것도 유용하리라 생각한다.<sup>6)</sup> 인권교육과 평생학습도시를 결합시킨 것이 바로 인권교육도시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인권체험마을 조성사업 지원

이보다 더욱 규모가 작은 사업으로서 인권체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생각할 수 있다. 인권체험마을이란 영어마을처럼 각종 인권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공적 마을을 말한다. 장애인체험과 같은 인권적 상황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인공적 장치를 마을에 조성함으로써, 인권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권체험마을은 인권도시나 인권교육도시 안에 설치할 수도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 인권교육의 전문화

## (1) 인권교육내용의 전문화

### 1) 기존 인권교과목의 전문화

인권교육내용을 전문화하려면, 가장 먼저 기존의 인권교과목을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정확하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은 수정·보완하고, 내용이 시대상황에 뒤떨어진 경우에는 이를 현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한다. 나아가 현대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문적 분화현상에 발맞춰서 기존의 인권교과목을 전문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찰공무원 인권교과목을 각 전문영역에 맞게 ‘교통경찰과 인권’, ‘수사경찰과 인권’, ‘시위진압과 인권’ 등으로 세분화시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 2) 전문인권교과목 개발

5) 인권도시사업에 관해서는 우선 Stephen P. Marks 외, 국가인권위원회 (역), 『인권도시: 사회발전을 위한 시민의 약속』(국가인권위원회, 2011) 참고.

6) 이에 관해서는 이해주 외, 『평생학습에서의 인권교육 접목방안 연구』(국가인권위원회, 2008) 참고.

그러나 인권교육내용을 전문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인권교과목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면서,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전문인권영역이 출현하고 있다. 정보인권이나 기업과 인권 영역 등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된 정보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인권’이나 ‘기업과 인권’ 등과 같은 새로운 전문인권교과목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와 인권’이나 ‘의료와 인권’ 등도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전문인권교과목이라고 말할 수 있다.

### 3) 통합형 인권교과목 개발

전문인권교과목을 개발하는 것 이외에도 통합형 인권교과목을 개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인권과 장애인인권을 통합한 ‘아동장애인의 인권’이라는 교과목을 생각할 수 있다. 아니면 여성과 아동 그리고 장애인을 통합한 ‘여성아동장애인의 인권’과 같은 교과목도 모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의료와 사회복지 및 인권을 결합한 통합형 인권교과목 등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전문인권교과목과 통합형 인권교과목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많은 경우 양자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양자를 개념적·영역적으로 구별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 4) 기존 인권교육교재 개정

인권교과목을 전문화하는 것과 동시에 교과목을 뒷받침하는 교재 역시 전문화해야 한다. 우선 기존에 출간되어 있는 인권교육교재를 현 상황에 맞게 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공공영역의 인권교육에 필요한 인권교육교재를 다수 발간하였다.<sup>7)</sup> 그러나 이들 교재들은 2005년 전후에 만들어진 것으로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교재들은 현 시대적 상황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할 필요가 있다.

### 5) 각 분야별 인권교육교재 개발

각 영역 및 분야에 적합한 인권교육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테면, 공공영역, 학교영역, 시민사회영역에 적합한 인권교육교재를 개발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또한 공공영역의 인권교육교재도 각 세부영역별로 구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령 경찰공무원 인권교육교재, 군인권 교육교재, 법원공무원 인권교육교재, 검찰공무원 인권교육교재, 일반행정공무원 인권교육교재가 그것이다. 학교영역의 인권교육교재도 초등학교용 인권교육교재, 중등학교용 인권교육교재, 대학용 인권교육교재로 나누어 개발할 필요가 있다.

7) 예를 들어, 국가인권위원회, 『검찰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인권전문 인력양성 연수교재, 2005); 국가인권위원회,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인권전문 인력양성 연수교재, 2005); 국가인권위원회, 『교정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인권전문 인력양성 연수교재, 2005) 등.

## 6) 전문인권교육교재 개발

전문인권교과목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권교과목도 개발해야 한다. 이를테면, ‘정보인권’이나 ‘기업과 인권’, ‘사회복지와 인권’, ‘의료와 인권’ 등과 같은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전문인권교육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다만 이 실행과제는 인권교육의 전문성을 위해 성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시간을 들여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 7) 통합형 인권교육교재 개발

이렇게 전문인권교육교재를 개발하는 것과 함께 통합형 인권교육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통합형 인권교육교재 역시 개발해야 한다. 이 실행과제를 추진하는 방식은 전문인권교육교재를 개발하는 방식과 같다. 이에 대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필자들에게 외부용역을 주어 과제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8) 인권교육사례집 개발

인권교육을 생동감 있게, 다시 말해 인권감수성이 생생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실행하려면, 추상적인 인권이론을 중심으로 하여 인권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다양한 인권사례를 제시하면서 인권교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권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쌍방향의 수평적 소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만 인권감수성이 생생하게 교육참여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따라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할 만한 인권교육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사례집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 (2) 인권교육강사의 전문화

### 1)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체계화

인권교육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각 부처나 영역별 혹은 지역별로 다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을 통일적으로 체계화해야 한다. 또한, 양성과정 자체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이 양성과정을 수료하려면 자연스럽게 인권교육강사들이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전문분야별 인권교육강사 양성

아울러 각 전문분야를 다룰 수 있는 인권교육강사를 양성해야 한다. 인권교육강사가 인권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분야에 걸쳐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자기가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성 역시 겸비하고 있어야 한다. 마치 대학교교원들이 기본적인 수준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전공을 통해 개별적 전문성을 획득하고 있듯이, 인권교육강사 역시 기본적 전문성과 개별적 전문성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한다.

## (3) 인권교수방식의 전문화

### 1) 인권친화적 교수법 개발

교재개발과 더불어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인권교육에 적합한 교수법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물론 인권교육에 필요한 교수법이나 방법론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이미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sup>8)</sup> 그러나 이러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한다. 대학에 몸담고 있는 필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교수자의 경우 흔히 자신은 전문가라는 생각에 자신의 사용하는 교수법에 별 문제를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 자신의 교수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렵다는 점 역시 사실이다. 아울러 참여와 토론 혹은 창의적인 교수법이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을 하면서도, 막상 이를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근거에서 요즘 각 대학들은 교수학습센터 등을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교수법 강좌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들 역시 이러한 교수법 강좌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필자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배운 경우가 많다.<sup>9)</sup> 그러므로 인권친화적 교수법을 개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2) 다양한 교수방식의 인권교과목 개발

다양한 교수방식을 적용하는 인권교과목을 개발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일단 요즘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강좌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사이버 강좌는 교수자와 참여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사이버공간을 통해 소통한다는 점에서, 자칫 지식전달 위주의 강좌가 되기 쉽다. 이는 소통과 참여를 강조하는 인권교육에 다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 강좌가 지닌 강점을 살리면서 그 약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방식의 교과목을 개발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즉 온라인 강좌와 오프라인 강좌를 혼합하는 방식이다. 온라인을 통해서만 인권에 관한 지식을 전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오프라인 강좌에서는 교수자가 참여자와 직접 소통하면서 참여와 토론을 유도함으로써, 인권감수성을 제고하는 인권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수의 교수자가 협력해서 강좌를 운영하는 팀티칭 방식의 교과목을 적극 개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sup>10)</sup>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지닌 교수자가 다수 참여하여 교과목을 운용하면, 참여자 역시 인권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 3) 인권교육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인권교육에 대한 교수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인권교육강사와 같은 전문가들은 흔히 자신이 사용하는 교수방식에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

8) 예를 들어, 이종태 외, 앞의 연구용역보고서 등 참고.

9) 독일의 사회학자인 니클라스 루만(N. Luhmann)이 강조한 것처럼, 인식주체는 자신이 볼 수 있는 것만 볼 수 있을 뿐이고,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은 볼 수 없다.

10) 이를 제안하는 홍성수, “한국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현황과 과제”, 『제1회 인권교육 정책토론회: UN 인권교육프로그램과 한국의 대학(원)에서의 인권교육 자료집』, 한국인권재단(2011. 4. 25), 41쪽 참고.

체적으로 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 때 성공적으로 인권교육을 수행하는 우수사례를 알려주면, 자신의 교수법을 개선하는 데 아주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 **4) 인권교육 교수법매거진 발간**

위에서 언급한 ‘인권교육 우수사례 전파’는 인권교육 교수법매거진을 발간함으로써 좀 더 체계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 만약 이를 별도로 발간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인권교육 뉴스레터 안에서 인권교육 교수법 분야를 특화시키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교수법 매거진을 발간하여 관련자들에게 전파하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4) 인권교육실행체계의 전문화**

##### **1) 각 영역별 인권교육프로그램 표준모델 개발**

인권교육실행체계를 전문화하려면, 먼저 각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프로그램 표준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지금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단 다음 세 가지 영역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공공영역과 학교영역 그리고 시민사회영역이 그것이다. 이러한 공공영역과 학교영역 그리고 시민사회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인권교육프로그램 표준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인권교육의 통일화·체계화·합리화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2) 각 영역별 인권교육 평가지표 개발**

한편 인권교육이 원래 목표한 바대로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으려면, 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인권교육에 대한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평가지표가 개발되어야만 인권교육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이러한 평가결과를 인권교육에 다시 환류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인권교육 평가지표도 크게 공공영역, 학교영역, 시민사회영역에 맞춰 개발할 필요가 있다.

#### **(5) 특정분야 인권교육 강화**

##### **1) 정보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오늘날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척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 역시 덩달아 증가하면서 정보인권이 새로운 인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아직도 사회 각 영역에서는 정보인권의 중요성에 대해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정보인권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2) 기업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정보인권과 함께 요즘 새로운 인권의 화두로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기업인권이다. 과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이 화두가 되었는데, 지금은 이를 넘어서 인권경영이 새롭게 부

각되고 있다. 이는 그 만큼 기업 안에서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제고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발맞추어 기업인권이란 무엇인지, 왜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3) 사회복지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사회복지인권에 대한 교육 역시 강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문제에 대한 복지문제가 점점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고, 이를 넘어서 사회복지가 새로운 정책적 이슈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가령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은 사회복지인권과 직결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인권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권을 강화한다는 의미도 함께 내포한다.

### 4)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 강화

‘나영이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날 아동들은 성적 폭행이나 유괴, 아동 학대와 같은 각종 인권침해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힘없는 아동이 인권침해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아동인권에 대한 교육 역시 강화해야 한다.

### 5)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에 대한 실태조사결과가 시사하는 것처럼, 인권교육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높다. 교원이야말로 학교영역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직접적인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교원 자신이 인권이나 인권교육에 대해 무지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면, 인권교육이 제대로 수행될 리 만무하다. 교원 자신이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지니고 있어야만, 제대로 된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교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6) 고위행정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실태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행정공무원은 공공영역에서 가장 인권교육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다. 이는 이미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로 제출된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법무분야, 군대분야, 경찰분야, 행정분야, 사회복지분야 등에서 인권교육이 그 이전보다 양적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용역보고서는 인권교육의 체계와 기반 구축, 인권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볼 때 경찰분야가 상대적으로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경찰과 군대분야에서는 인권교육 전담조직이 자체적으로 구성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직무교육의 일환으로 인권교육을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는 135개 교육과정에 인권과목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sup>11)</sup> 이에 비해 이 연구용역보고서는 행정분야에서는 인권교육이 거의 전무하다고 평가

11) 이를 지적하는 배경내, “인권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연구 - 인권운동 영역에서의 좌표 모색을 중심으로 -”, 『인권법평론』 제4호(2009), 12쪽(여기에는 필자들이 갖고 있는 논문초고로 인용한다).



하고 있다.<sup>12)</sup> 물론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일반행정 분야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횟수이기는 하지만 인권교육이 정례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13)</sup> 다만 이 자료를 보면, 인권 전반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로 다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이처럼 일반행정공무원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인권교육이 등한시되고 있다. 이는 그 대상을 고위직 공무원으로 삼게 되면 더욱 심해진다. 그러므로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영역에 대한 인권교육을 성공시키려면, 고위행정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 4. 인권교육의 제도화

##### (1) 인권교육실행에 필요한 제도적 기초 확보

###### 1)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인권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실행과제는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인권교육지원법’으로 약칭함)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sup>14)</sup> 인권교육의 제도화에 속하는 이 과제는 많은 연구가 지적하는 것처럼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질화하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인권교육지원법(안)은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질화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인권교육의 정의 및 기본원칙,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권교육 책무, 인권교육종합계획, 인권교육위원회, 인권교육협의회, 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 실시 및 평가, 인권교육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교육지원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면, 그 동안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시하면서 제기되었던 상당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인권교육지원법(안)은 인권교육에 대한 총괄주무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정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해 가령 법무부는 다른 의견을 개진하고 있기는 하지만,<sup>15)</sup> 만약 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되는 모든 인권교육을 계획, 실행, 감독,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 인권교육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인권교육지원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12) 정원오 외, 『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6), 2쪽.

13) 나달숙,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비추어 본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제2회 인권교육정책 토론회: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공무원 교육』, 한국인권재단(2011. 6. 23), 49-53쪽.

14) 이에 관해서는 우선 허종렬,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과정 검토”, 『법과인권교육연구』 제4권 제2호(2011. 8), 19쪽 아래 참고.

15) 이를 보여주는 홍관표, “인권교육법제 및 정책현황과 과제 토론회”, 『제2회 인권교육정책 토론회: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공무원 교육』, 한국인권재단(2011. 6. 23), 35-38쪽 참고; 이 지정토론회는 현재의 인권교육지원법(안)이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조목조목 제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로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응할 수 있는 반박논리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인권교육지원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 이 법률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인권교육지원법 시행령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지원법이 다소 불완전하더라도 시행령을 촘촘하게 만들 수 있다면, 실제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적어질 것이다.

### 3) 인권교육원 설립

다음으로 역점을 두어야 할 과제는 가칭 인권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 역시 인권교육의 제도화에 속하는 실행과제이다. 인권교육을 총괄하는 인권교육원을 설립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논의되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도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상태다.<sup>16)</sup> 그러나 현재 계류 중인 인권교육지원법(안)은 인권교육원의 규모 및 기능을 축소하여, 이를 인권교육센터로 예정하고 있다(법안 제11조). 그렇지만 이렇게 인권교육원을 인권교육센터로 축소하면, 인권교육원이 본래 예정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필자들은 인권교육원이 인권에 대한 교육, 연구 및 평가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인권교육원이 인권교육을 실질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소속된 인권교육센터로 조직화하기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전문연구교육기관으로 설립해야 한다. 마치 헌법재판소가 산하에 헌법재판연구원을 또는 법무부가 산하에 형사정책연구원을 두고 있는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도 산하에 독자적인 인권교육연구기관으로서 인권교육원을 둘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필자들은 인권교육원을 제도화된 인권교육과 제도화되지 않은 인권교육을 연결하는 공간, 다시 말해 ‘네트워크 복합체’로 조직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도화된 인권교육과 제도화되지 않은 인권교육은 각기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 두 인권교육은 서로가 서로를 보완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필자들은 이러한 역할을 바로 인권교육원이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권교육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현장의 인권교육전문가를 인권강사로 위촉한다면, 인권교육원에서 제도화된 인권교육과 제도화되지 않은 인권교육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점에서 인권교육원을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의 기관으로 설립할 수도 있지만, 한국연구재단처럼 독립된 공법인으로 설립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다만, 인권교육원을 독립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감독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4) 인권전문대학원 설립 모색

그 밖에 인권교육의 제도화에 관한 전략과제로서 인권전문대학원(Human Rights School)을 설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권역별로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을 지정하여 인권교육 및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 같은 방안만으로는 본래 의도했던 목표를 실현하기 어렵다. 한두 명의 인권전문가가 한 대학의 방향을 주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현재 상당수의 법학전문대학원이 인권교육연구중

16) 이에 관해서는 하미승 외, 『인권교육원 설립방안 연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6) 참고.

심대학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변호사시험이라는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이들이 과연 얼마나 인권교육 및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없지 않다. 이 점에서 아예 인권전문교육 및 인권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는 인권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소수의 대학과 협력하여 인권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인권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운용한다면, 인권전문대학원의 최고위과정 등을 활용하여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좀 더 손쉽게 행할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 **(2)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

### **1) 인권교육에 대한 감독 및 평가체계 제도화**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감독 및 평가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만약 이를 제도화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권한으로 확보하지 않으면, 자칫 형식적인 것으로 전락할 수 있는 인권교육을 실질화할 수 없다. 물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권교육지원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법적 제도를 통해서도 감독 및 평가체계를 분명하게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2) 시민사회 인권교육단체와 네트워킹 방안 모색**

인권교육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현장일선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시민사회 인권교육단체와 지속적으로 네트워킹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 인권교육단체가 정기적으로 회합할 수 있는 모임을 정례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3) 인권교육강사 협의회 운영 검토**

전국의 인권교육강사가 지속적으로 회합할 수 있는 인권교육강사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인권교육강사 협의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 이 협의회 모임을 통해 인권교육강사들의 유대 및 전문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인권교육에 대한 절차, 수준, 방법 등을 전문화·통일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4) 각종 국가시험에 인권교과목 추가 모색**

공무원 인권교육이 실질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상당수의 고위공무원들이 인권교육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법과 인권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믿는 법무영역의 공무원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래서 경찰이나 군대분야에 비해 법무분야에서는 인권교육 역시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이루어졌다. 필자들이 볼 때, 이들 집단에서는 법이 인권을 포함하는 분야인데 자신들은 이 법에 대한 전문가에 해당하므로 굳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된

17) 만약 현실적으로 인권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현재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이 각각 마련하고 있는 인권교육연구센터에서 단기코스의 인권전문가 양성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시사해주신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의 홍성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다. 그러나 법과 인권이 서로 일치하는 개념도 아니고, 법교육과 인권교육이 지향하는 바도 서로 같지만은 않다는 점에서,<sup>18)</sup>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은 이러한 태도는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들은 이를 위한 한 방안으로서 공무원시험에 인권교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법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필수적인 관문인 변호사시험에 인권교과목을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sup>19)</sup> 다만 이 방안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없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은 본래 취지와는 달리 난이도가 상당히 높게 설정되어 있고, 출제범위나 과목수도 상당히 많아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탈락률 역시 예상보다 높아 법학전문대학원 자체가 일종의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sup>20)</sup> 이러한 상황에서 시험과목으로 인권교과목을 추가하는 것은, 수험생들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교과목이 본래 의도하는 취지를 살릴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만약 인권교과목을 변호사시험에 어떻게든 추가하고자 한다면, 다음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는 현재 예비시험으로 실시되고 있는 법조윤리시험처럼 ‘Pass/Fail’ 형식으로 운영하는 방안이다. 둘째는 인권교과목을 일종의 필수과목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관해 미국의 권위 있는 하버드 로스쿨이 지난 2006년부터 국제인권법을 포함한 국제공법을 1학년 과목으로 지정한 것이 의미 있는 시사를 한다고 생각한다.<sup>21)</sup> 이외에도 고위공직자를 선발하는 행정고등고시나 각종 공무원시험에 인권교과목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sup>22)</sup>

### (3) 인권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1) 각 영역별 인권친화성 지표 개발

인권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면, 일정한 교육환경이 인권친화적인 환경인지 여부를 판단해주는 객관적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인권친화성 지표이다. 그리고 이 지표는 각 영역별로 세분화하여 개발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공공영역, 학교영역, 시민사회영역으로 구분하여 인권친화성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표가 개발되면, 더 나아가 각 영역을 다시 세분화하여 인권친화성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2) 대학평가항목에 인권지표 포함 추진

대학평가항목에 인권지표를 포함하는 것도 인권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등이 실시하는 대학평가는 각 대학들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무시하지 못할 영향력을 발휘한다. 대학평가항목에 새로운 평가기준

18) 이에 관해서는 이종태 외,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정립모색 연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 2005), 90-92쪽.

19) 이 방안은 ‘인권교육의 권리화’에 속하는 전략과제라 말할 수 있다.

20) 이 문제를 지적하는 김창록, “한국 로스쿨, 제3차 ‘수(數) 파동’: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둘러싼 논란”, 『법과 사회』 제39호(2010. 12), 343쪽 아래 참고.

21) 조효제, 『인권의 문법』(후마니타스, 2007), 27쪽.

22) 이를 지적해주신 백석대학교의 나달숙 교수님께 감사 را 드린다.

을 추가하면, 대학들은 이렇게 추가된 평가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대학정책을 손쉽게 바꾸고 있는 한다. 지난 2010년에 새롭게 추가된 강의평가점수 공개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중앙일보』 대학평가가 이 항목을 새롭게 추가하자, 각 대학들은 그 동안 수용하지 않았던 강의평가점수공개를 곧장 받아들이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학평가항목에 인권지표를 추가하는 것은 특히 각 대학들이 인권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4) 인권교육에 필요한 물적 기반 확보**

##### **1) 예산확보방안 모색**

인권교육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예산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자본주의에 기반을 둔 오늘날의 민주적 법치국가 사회에서 국가가 일정한 정책을 수행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첫째는 정책을 수행하는 데 기반이 되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고, 둘째는 정책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다. 여기서 첫째 요건은 우선 인권교육지원법(안)이 제정되면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다. 문제는 두 번째 요건이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을 위해 확보한 예산규모를 보면, 이는 현실적으로 인권교육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는 필자들 역시 막막하게 생각하는 과제인데, 기능적인 방안으로서 전문 로비스트 그룹을 운용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2) 인권교육펀딩체계 구축**

인권교육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권교육펀딩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인권교육에 필요한 재원으로서 국가적 예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펀딩에 기대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여기서 고려해야 할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펀딩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펀딩의 주체로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리할 수 있는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아니면 한국인권재단과 같은 민간법인과 협력하여 펀드레이징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 **4. 인권교육의 지역화**

##### **(1) 지방자치단체와 인권교육 협력 강화**

##### **1) 각종 인권조례제정 지원**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등이 적극적으로 인권 관련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인권의 의미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권교육조례를 제정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게 여의치 않다면, 학생인권조례 등과 같은 학교 관련 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가령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지방인권교육에 인권교육강사 지원**

지방자치단체와 인권교육에 관해 협력하는 방안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강사를 지원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는 이미 실행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권교육강사를 요청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문성과 감수성을 고루 갖춘 인권교육강사를 지원하면, 인권교육을 지역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2) 지역시민사회와 인권교육 협력 강화**

### **1) 지역인권교육협의체 운영**

지역시민사회와 인권교육에 관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우선 각 지역별로 인권교육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지역인권교육협의체를 운영하면, 이를 매개로 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역시민사회, 특히 지역인권교육단체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 물론, 지역인권교육협의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인권단체만 염두에 둘 필요는 없다. 여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도 포함시키면, 인권교육에 관해 좀 더 통합적인 소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2) 시민사회-대학 인권강사 매칭 프로그램 개발**

각 지역의 시민사회와 대학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여하는 방안도 제시할 수 있다. 각 지역대학들이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문성과 인권감수성을 고루 갖춘 인권교육강사가 없어 이를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현장에서 다년간 인권교육강사로 활동했던 시민사회의 활동가를 각 대학들이 인권교육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인권교육강사 수급에 따른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각 대학들이 자신들에게 필요한 인권교육활동가를 적절하게 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사회-대학 인권강사 매칭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면, 각 대학들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인권교육활동가를 손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다.

## **(3) 지역대학과 인권교육 협력 강화**

### **1)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협의체 운영**

지역대학과 인권교육에 관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지역별로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을 지정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는 이들 대학들과 인권교육에 관해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간 이에 대한 시도가 몇 번 이루어지는 했지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지는 못했다.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 협의체를 운영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 **2) 각 대학 인권교육센터와 네트워킹 구축**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교육연구중심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이외에도 인권교육에 관심이 있어 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한 경우도 있다. 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인권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이 있을 수 있다. 이들 대학들과도 지속적으로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3) 대학 인권교과목 개발 지원**

각 대학들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대학들이 다양한 인권교과목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것도 제시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동안 인권교육에 관해 축적한 노하우를 각 대학들에게 지원해주면 자신들에게 적합한 인권교과목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때 인권교과목은 크게 두 가지로 유형화하여 개발할 수 있다. 교양교과목으로서 인권교과목과 전문교과목으로서 인권교과목이 그것이다.

### **(4)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적 협력 강화**

#### **1) 동아시아 인권레짐 구축 추진**

현재 동아시아는 독자적인 인권레짐을 갖추고 있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권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쥐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아시아 인권레짐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물론, 이 작업은 매우 방대한 작업이므로, 장기적으로 넓은 비전과 안목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 **2) 동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 협의회 창설**

동아시아 인권레짐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방대하고 장기적인 일일 것이므로, 우선적으로는 동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 협의회를 창설하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동아시아 국가인권위원회 협의회를 창설하여 운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인권레짐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각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교류·협력하는 것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IV. 글을 맺으며**

지금까지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를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지에 관해 대략적으로나마 살펴보았다. 여기서 제안한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 추진체계는 아직 여러 모로 불완전하다. 또한 이론적·실천적으로 좀 더 검증을 거쳐야 하는 내용도 여럿 담고 있다. 이는 앞으로 필자들이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큰 문제는 최근 들어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인권보다 기본적인 생존이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지속가능한 생존과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인권을 결코 도외시킬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